

조선대 로스쿨 설치 인가 가능성 있다

靑 추가 선정 필요성 언급에 실낱 희망

인구 비례 안맞고 지역민 반발 커 4일 발표 주목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다음달 4일로 연기키로 했다가 전격 발표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탈락 대학 관계자들이 서울 정부중앙청사를 방문,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가 로스쿨 설치 인가에서 제외되면서 광주·전남 여론은 폭발 직전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 조정을 시사하면서 조선대의 막판 로스쿨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잠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대의 로스쿨 설치 인가 가능성 등을 조명해본다.

◇로스쿨 인가 대학 조정 가능하나= 청와대가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표명하며 추가 선정 필요성을 제시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로스쿨 선정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의 로스쿨 인가 대학 조정 방침에 교육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 서명법 대변인은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발표 연기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내고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오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며 "4일 최종 발표 내용도 잠정안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개 광역단체 1개교 배정 원칙은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와 관련, 로스쿨법상의 인가 기준·각종 지표와 지역간 균형에 부합하도록 결정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대 선정 가능성 있나= 가능성은 반반이다. 우선 청와대가 1



개 광역단체 1개교 원칙을 거론함에 따라 조선대의 막판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와 전남에 전남대 단 1곳만 선정됐기 때문이다. 조선대가 광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남지역 교육 수요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구 및 사법 수요가 제주나 전북 등에 비해 월등한데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조선대의 막판 로스쿨 인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교육부는 조선대보다는 경남 경상대의 로스쿨 설치 인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대 등이 막판 로스쿨 설치 인가 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정원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기존 선정 대학들과 탈락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조선대의 평가 점수가 낮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달 4일 교육부의 수정안을 그대로 발표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로스쿨 정원을 200~300명 정도 높이고 추가로 2~3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 참여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로스쿨 설치 인가 문제를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남선거구 신당 “그대로” 한나라 “둘 축소”

“영광·함평, 강진·완도 어느쪽으로 뉘느냐” 이견

■ 광주·전남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되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에 밝힘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이 행정구역이 분구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만 통합 조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광주 서구와 전남 여수는 현행 각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광주의 경우 광산구가 분구 대상이어서 현행 7개 선거구에서 8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문제는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지역구 조정,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전남지역 선거구에 대한 일괄적 조정을 통해 현행 13곳의 의석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전남지역의 통폐합 지역구는 인근 선거구에 붙이자는 입장이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영광·함평의 경우, 영광은 장성에, 함평은 나주에 붙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

다. 여기에 기존의 장성·담양·곡성의 지역구는 영광·구례의 지역구에서 구례를 분리, 담양·곡성·구례로 묶자는 입장이다. 또한, 영암·장흥의 경우, 영암은 강진·완도에, 장흥은 화순에 붙여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면 전남지역 선거구는 현행 13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면 영광·함평의 경우, 함평을 인근 지역구인 나주·화순에 붙이고 영광은 장성·담양·곡성에 붙이자는 주장이다.

또한, 강진·완도의 경우, 강진을 영암·장흥에 붙이고 완도는 해남·진도에 붙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지역 대표성과 생활권, 인접성 등에 문제가 있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1개의 선거구가 늘어난 것을 감안, 정계특위 등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1개의 선거구를 감축하는 지역구 조정안을 마련, 호남권이 영남권과 같이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한나라당이 제시할 지역구는 기존인 영광·장성·담양·곡성에서 영광·장성, 담양·곡성·구례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전남 13개 유지)



■ 한나라당(전남 11개로 축소)



공동대표 문제 해결 최대 걸림돌

■ 신당-민주당 선행 통합될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통합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공동대표 문제. 애초에 논란이 예상됐던 지분문제와 관련, 신당과 민주당 모두 공식적인 지분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순하규-박상천 공동대표'에 대해 신당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통합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신당이 공동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박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호남당' 이미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신당 측 핵심인사는 지난달 31일 "현재 지분문제는 정말로 없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상시선의 문제도 타결되지 않으면 신당이 통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 박 대표가 당내 일부 인사에 의해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점도 통합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설 이전 통합 성과가 나올 것란 예측도 적지 않다.

신당 손 대표의 최측근은 이날 "통합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그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설 연휴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아 통합이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세대 디지털-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청기 제조업체가 있으나 세기보청기만이 진정한 보청기입니다. 세기보청기만이 세계에 우뚝서고 있습니다. 세기보청기만이 진정한 보청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는 세기보청기

116-8188 116-3311
10215301-9000